

'가짜단골'로 신용평가?... 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경기도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 씨. 그는 요즘 홍보대행사에 의해 배달 앱 허위 리뷰·주문 작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쟁 업체의 리뷰·주문 건수가 크게 늘어 A 씨가 계보다 앱상에서 상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앱에서 가게가 상위에 노출될수록 소비자의 눈에 더 잘 띄고, 실제 주문도 이어진다. '정직함이 무기'라고 생각했던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플랫폼 금융 대출 정책을 보고 고민이 더 깊어졌다. 리뷰와 주문 건수에 따라 대출 신용도도 올라간다.

금융위는 1월 언택트 금융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 소비자 평판 등을 가리킨다. 네이버 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에서의 사용자 리뷰와 주문 건수를 뜻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사(CB)의 설립을 허가하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금융 CB사란 개인의 소득, 부채, 재산 등을 따져 신용을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이 개인 사업자의 주문 건수, 작성된 리뷰 등으로 신용을 평가

하는 것이다. 비금융 CB사가 자리 잡으면 대출이 힘들었던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비금융 CB사가 평가할 비금융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작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가구매'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채팅방이 나온다. 채팅방은 판매자와 허위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장소다. 리뷰·주문 건수를 허위로 늘리려는 판매자와 이를 통해 돈을 벌려는 구매자의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허위 구매자는 건당 약 1000원을 받는다. 방법은 간단하다. 허위 구매자가

가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면 판매자는 그에게 빈 박스만 배송하고 가구매·리뷰에 대한 보상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자영업자들끼리 리뷰·주문 건수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업체들의 얘기를 주고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중복 구매도 없이 실제 유저 아이디로 진행해 조작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번에 건수가 늘면 플랫폼이 허위 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수일에 걸쳐 리뷰와 주문을 쪼갬다고 덧붙였다. 조작 회사들은 오픈마켓의 경우 즐겨찾기 100건당 3만 원, 프리미엄 구매명 1건당 4500원 수준을 받는다.



▶10면에 계속 문수빈 기자 bean@

확진자 급증하는데 안센마저 혈전 논란 '4차 유행' 문턱, 혼돈의 'K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신규 확진환자가 97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더해, 백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31명 증가한 11만14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발생은 714명이다. 신규 확진자 및 국내발생 확진자는 1월 7일(832명)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5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날씨가 풀리고 야외활동이 늘면서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유입-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은 탓에 미확인 감염원을 중심으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

주간(1~14일) 신규 확진자 중 26.9%는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네제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총 904만4000명분(1808만8000회분)이다.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추가 도입 예정이다. 이 중 안센 백신은 희귀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으로 2분기 중 국내 도입이 불투명하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 도입 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상반기 내 백신 공급사별 구체적인 물량과 3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백신 공급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15일부터 ब्ल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자 증명서는 위변조가 불가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격리 완화 등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갑질' 아파트 앞 '택배 산성' 14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와 롯데택배·우체국택배 기사들이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자 고객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아파트는 이날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손수레를 이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청량리 고밀개발

국토부, 2차 후보지 13곳 발표... 1만2900가구 신축주택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총 34곳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3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저층주거지 1곳)이다. 미아역세권과 용두동 역세권, 수유동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저층주거지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양호한 입지에도 저밀 개발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차 후보지에서만 1만2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후보지 13곳의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민간 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도 민간 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445가구에서 738가구로 늘어나지만, 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로 고밀 개발하면 989가구로 34% 증가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액이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격도에 오른다. 이재명 기자 lly0403@

포스코,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리튬공장' 짓는다

"2023년 준공, 4만3000t 추출" 포스코가 리튬 상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차전지소재 생산능력을 더욱 키운다. 포스코는 9일 이사회에 광양 경제자유구역 울촌산업단지 내 연간 4만3000톤 규모의 광석 리튬 추출 공장 투자사업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리튬 4만3000톤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리튬 추출 공장은 호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 광석을 주원료로 해 자체 연구·개발한 생산 공정을 적용해 생산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장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짓는 공장은 전

기차 주행거리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산화리튬을 전용으로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이차전지업계에서는 탄산리튬을 주원료로 하는 양극재를 주로 생산해왔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차전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니켈 함유량 80% 이상의 양극재가 개발되고 이에 쓰이는 수산화리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리튬 생산을 시작으로 포스코는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리튬과 마찬가지로 양극재 필수 원료인 고순도니켈 생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 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제련 공정을 개발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잘나가던 대형마트 '눈물의 폐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수혜를 누리며 3월부터 완전한 매출 회복세를 보이는 백화점과 대조적으로 대형마트에 드리는 그늘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폐점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매장 수가 매출로 연결됐지만 소비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해진 만큼 대형마트 업계로서는 수익성 개선이나 현금 확보를 위해 폐점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점포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온 롯데쇼핑은 지난달 말 롯데마트 구리점을 폐점했다. 1999년부터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점포는 한때 전국 롯데마트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때 '잘나가던' 매장이었다.

구리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던 롯데마트는 올초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임차료 2배 수준을 요구하자 난색을 표했다. 입찰은 네 차례 유찰됐고 그럴 때마다 임차료가 떨어졌다. 롯데마트는 더 싼 가격을 기대하며 5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사이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 식자재 체인점을 운영하는 엘마트가 입찰에 뛰어들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구리점 폐점은 표면적으로는 구리시와

점포 정리 이어가는 대형마트 업계

롯데마트	지난해만 12개 점포 정리... 3월 롯데마트 구리점 폐점
이마트	4월 28일 동광주점, 5월 4일 인천공항점 폐점
홈플러스	대구 스타디움점 연내 영업 종료... 부산 가야점 내년 폐점

롯데, 구리점 20년 만에 문닫기로 홈플러스, 부산 가야점 매각 결정 이마트, 동광주·인천공항점 종료

'온라인'에 밀려 점포 정리 잇따라

롯데마트의 매장 임차 계약이 불발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롯데마트의 임대차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소형 식자재마트가 발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롯데마트가 판단 착오로 허를 찔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롯데마트는 구리점 외에도 올해 실적 부진 점포 위주로 추가 폐점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전체 700여 개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200여 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롯데마트는 지난해에만 12개점이 문

을 닫았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안산점과 대구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등 4개 점포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실시한 홈플러스는 최근 전국 5위권 매장인 부산 가야점 매각을 결정했다. 올해도 점포 정리 작업은 계속된다. 올해 2월 대전탄방점 영업을 종료했고, 대구 스타디움점도 연내 영업 종료에 예정돼 있다. 부산 가야동 점포는 내년 초 영업 종료에 예상된다.

이마트도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점포 정리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28일 동광주점에 이어 다음달 4일 인천공항점의 영업을 종료한다. 영업 종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마트는 해당 지점에서 일하던 인력을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역시 최근 수년간 점포 정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마트는 2017년 서울 장안점을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바꿨고 울산 학성점은 문을 닫았다. 2018년엔 인천 부평점과 대구 시지점, 2019년 일산 덕이점과 서부산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취업자수 늘었지만 힘 못쓰는 '경제허리'

기저효과에 지난달 31.4만명 ↑ ... 30·40대 고용률은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9.8%로 0.3% 포인트(P), 경제협력개발기구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0.3%P 상승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함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0·40대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전년 동월보다 오른 가운데, 30대는 74.6%로 0.8%P, 40대는 76.9%로 0.4%P 각각 하락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

해를 본 산업들의 회복이 더뎠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업 채용 재개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효과로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에선 고용률이 각각 43.3%로 2.3%P, 42.3%로 1.1%P 급등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3만6000명 늘고, 실업률은 4.3%로 0.1%P 올랐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0.1%P 올랐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단기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일부가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수험생 인강 듣느라 거리 텅텅 손님 끊긴 상인들 한숨만 가득

르포 사라지는 골목상권

노량진 컵밥 거리

"코로나도 무섭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무서워요.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보느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네요. 참 힘들어요."

14일 노량진 컵밥 거리는 명성과 달리 문을 연 컵밥 점포가 거의 없었다. 대로변에 길게 늘어진 노점상들 사이 들쭉날쭉 문은 닫은 가게가 더 많았다. 이날 문을 연 점포는 20여 개 중 6곳 내외. 매대 첩판 위, 수북이 쌓인 베이컨과 김치 고명 뒤로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상인은 오랜만에 손님 들어오자 반색하며 일어난다. 무심한 행인만 보일 뿐, 끼니를 때우러 이곳을 찾는 고시생은 없었다.

노량진 컵밥 거리는 2000년 초반 학원가를 중심으로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컵밥은 일회용 컵(그릇) 속에 밥을 넣고 그 위에 고기, 김치 등 여러 고명을 얹은 덮밥이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가격(3500원)으로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어 수험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미관과 위생, 보행 안전 등의 우려로 동작구는 2015년 노점상인들과 협의해 거리를 재정비하고 특화 거리로 조성했다.

학원 쉬는 시간마다 컵밥 집 앞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복잡박박했던 대로변이 지금은 황량하다. 코로나19로 학원 수강 인원이 제한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전환하면서 노량진을 찾는 수험생이 줄었다. 여기에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권은 초토화됐다.

컵밥을 팔고 있는 노점상 김모 씨(66)는 "학생들이 학원도 안 가고 인터



손님이 끊겨 한산한 노량진 컵밥거리.

넷 강의로 들으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장사가 안 돼서 집에 간 상인도 많다"며 "우리 집이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 열댓 명은 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때는 사람들이 저 앞 건물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밥장사 30년 중 지금이 가장 힘든 거 같다"며 "평일은 장사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주말에 손님이 조금 있는데 들쭉날쭉 온다"고 귀띔했다.

손님과 접촉 거리가 가까운 노점 특성상 상인들이 느끼는 코로나19 불안감은 더욱 크다. 그러나 생계와 직결된 만큼 티를 낼 순 없다.

분식을 팔고 있는 노점상 박 모 씨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져서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바탕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생각지 못했는데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지만 사실 밀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전했다.

글/사진 윤기쁨 기자 modest12@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플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연커먼스토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심 공공주택 사업 '민간 주도' 원하는 주민 동의가 관건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보지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 13곳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의 사업이 순항하면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엔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했다.

후보지는 역세권과 옛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북구에선 서울지하철 4호선을 따라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수유역 인근이 모두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4중 역세권인 동대문구 청량리역(서울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분당선) 주변에서도 두 곳이 후보지가 됐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된 곳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활했다.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2012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강북구 수유12구역은 이번 사업으로 27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기회를 잡았다. 강북구 미아16구역과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에서도 재개발이 무산된 지 5년 만에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 서울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을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노후도	가구수
강북	1 미아역 동측	70%	623
	2 미아역 서측	86%	472
	3 미아사거리역 동측	84%	1,082
	4 미아사거리역 북측	78%	172
	5 삼양사거리역 인근	100%	341
	6 수유역 남측1	86%	510
	7 수유역 남측2	85%	311
동대문	8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76%	3,200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노후도	가구수
강북	9 구 수유12구역	72%	2,696
	10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83%	922
	11 구 미아16구역	88%	544
동대문	12 삼양역 북측	89%	588
	13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86%	1,390

※ 출처: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유12' 2700가구 대단지 변신 '미아16' '용두' 5년 만에 재추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민간개발' 기대 높아 난항 예상 사업후보지 '강북 솔림'도 문제

공급할 땅은 옛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만 남았다고 평가한다.

후보지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후보지 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뒤집어 말하면 주민에게 직접 동의를 얻는 과정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까다로운 입주권 요건과 정치적 상황은 주민 동의를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든다. 국토부는 2월 4일 이후에 매매된 부동산에 대

해선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현금청산 보상액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싼값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2월 4일 이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집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주민들도 이런 현금청산 규정 탓에 매매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 변화도 변수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정비지구(노후도·주민 동의율 등을 평

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사업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민간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사업을 뛰어넘는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쉽지 않다. 1차 후보지 가운데 일부에선 벌써 독자적인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후

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 설명회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 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역에선 30~40%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후보지 편중성 문제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넘어야 할 벽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4곳 중 영등포구(4곳)와 금천구(1곳)를 뺀 29곳이 강북지역에 몰려 있다. 강북권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수요를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강남권 지자체에선 후보지를 추천하지 않는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이라든지 접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사업 스킴(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야심차게 내놓은 LH '공공 전세주택' 전셋값 잡고 주거안정 '축매' 될까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 보증금은 시세 60~80% 수준 3~4인 가구 거주 충분한 공간 고품질 자재에 교통 편의성도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 전세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를 낼 필요가 없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세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지상 14층짜

리 신축 오피스텔이다. 1개동에 총 52가구(전용면적 54~83㎡)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올해 3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는 6월 예정이다.

이 주택의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1억8000만~2억 5000만 원으로 인근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전셋값과 비교하면 81% 수준이고,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60~70% 선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보다 거주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다. 모든 호실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을 갖췄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도 갖췄다.

교통 편의성도 높였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있고, 4호선 범계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도 가깝다. 이마트 등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및 관공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WGC2022
28th WORLD GAS CONFERENCE
DAEGU, KOREA 23-27 MAY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文 계약’ 모더나 공급 지연 가능성, 접종 총체적 위기

혈전 논란 여파 수급 불확실성 ↑
11월 ‘집단면역’ 사실상 어려워
모더나, 美 우선 공급계획 밝혀
선계약 EU·日 공급 시 韓 품귀

올 상반기 1200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신 수급 불확실성’으로 틀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확정된 백신은 상반기 접종 계획의 7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접종 후 희귀 혈전 생성을 이유로 30세 미만에게 접종을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포함돼 있어 이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의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분기부터 차례로 공급 예정이던 미국 제약사 얀센 백신도 혈전 생성을 이유로 미국 보건당국에서 접종 중단을 권고하면서 백신 공급이 총체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도입을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총 904만4000명분(1808만8000회분)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상반기 도입하려는 백신

물량은 2080만 회분이다. 이는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서 기존에 밝힌 확정 물량(1808만8000회분) 외에 271만2000회분이 추가 도입될 것을 시사했다. 이 추가 물량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포함됐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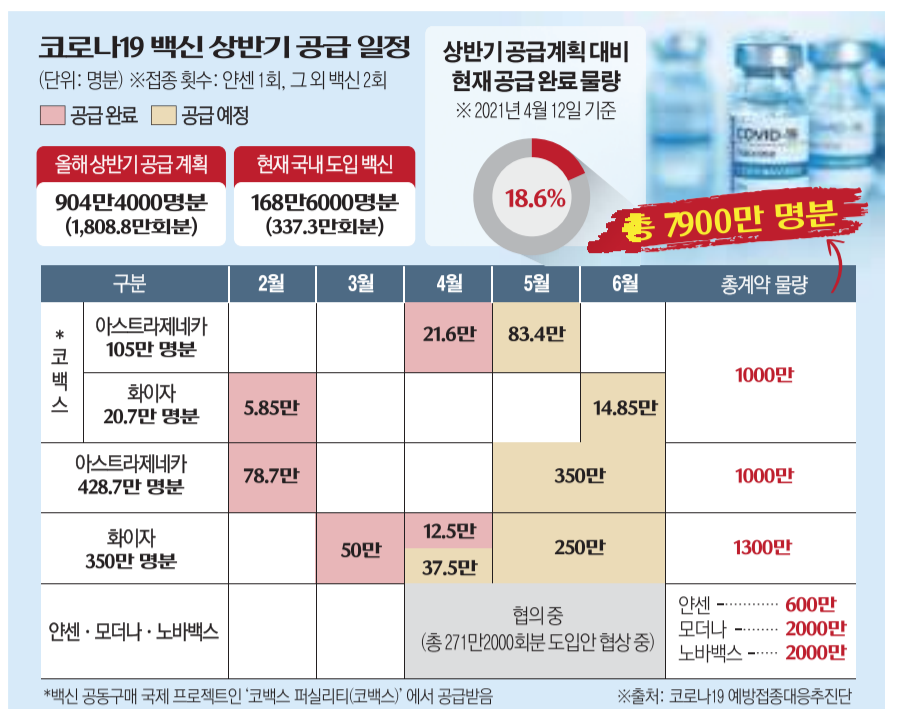
다만 얀센 백신을 제외하면 모두 2회 접종이 원칙으로, 12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분기 도입할 백신 물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영하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상반기 내 백신 공급사별 구체적인 물량과 3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백신 공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이 2분기부터 차례로 도입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물량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세 번째로 품목허가를 받은 얀센 백신은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질병 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용 중단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백 팀장은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일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안전성 논란으로 접종 중단 상황이 발생하자 모더나 백신 공급까지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반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 모더나 백신 공급량을 2000만 회분에서 두 배 많은 4000만 회분(2000만명 접종)으로 공급받는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시작 시기 역시 2021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더나가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얀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이미 선계약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에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릴 물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에 백신 공급 계획을 공개하며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



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미국 외 지역 공급망은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구축이 1분기 정보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2분기부터 도입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기술 도입계

약(기술 라이선스)에 따라 국내에서 만드는 이 백신은 현재 6월 초도물량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글로벌 규제 당국에서 아직 허가 승인은 받지 못했다.

14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23만9065명이다. 국내 인구(5200만 명) 대비 2.38%로, 전날 신규 접종자는 4만3389명에 그친다. 박미선 기자 only@

특수교사 20대 많아 ‘교직원 조기 집단면역’ 균열

30세 미만 AZ백신 접종서 제외
혈전 우려 10명 중 3명 ‘미동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으나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만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기 집단 면역을 기대했던 일부 학교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대 인력 비중이 높은 특수학교와 보건교사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책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특수교육·장애아보육 교사, 보건교사 등을 우선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하지만 2분기 AZ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 약 64만 명은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교사는 9162명으로 통상 임용고시 합격 뒤 경력 3~5년 이내이다. 20대가 많은 특수 2급 정교사는 3186명(34.7%)이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경우 입대 연령인 20대의 사회복무요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학교 종사자들의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육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AZ

백신의) 혈전 문제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집단 면역을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빠지면서 접종 계획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동의했던 교사들이 이를 철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희귀혈전증 부작용 발표 뒤) 우려가 커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없진 않다”면서도 “아이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입장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특수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날 기준 30세 미만을 뺀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보조인력 포함), 어린이집 장애어린이 보육·간호 인력의 접종 동의율은 69.9%다. AZ 백신을 맞은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접종 초기 동의율 88%(3월 4일 기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정책본부장은 “등교 확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접종 시기를 일부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방역 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던 교육 당국은 백신 불안 속에서 접종 동의를 끌어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자재의 모든 것 Q-Net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HRD Conference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SKT, 통신-투자 투트랙 '기업·주주가치' 높인다

37년 만에 '脫통신' 선언

SK텔레콤(SKTEL)이 14일 인적분할을 공식화했다. 회사를 통신과 비통신으로 쪼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함이다.

SKT는 14일 오후 인적분할 추진을 검토한다고 공식했다. 회사를 통신(MNO) 회사와 투자회사(홀딩스)로 나누는 방안이다. 통신회사 아래에는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가 배치되고, 투자회사 아래로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T맵모빌리티 등 자회사가 배치된다.

SKT는 통신회사를 '인공지능(AI) &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 컴퍼니(존속회사)'로, 투자회사를 'ICT 투자전문회사(신설회사)'로 구분했다. 존속회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구독형 마케팅, 데이터센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신설회사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투자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SKT는 상반기 내 중간지주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인적분할 추진 관련 의사결정을 확정한다.

SKT는 이번 인적분할로 탈 통신에 박

반도체·AI 등 뉴ICT 사업 확대 연내 중간지주사 설립 인적 분할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 제3 창업"

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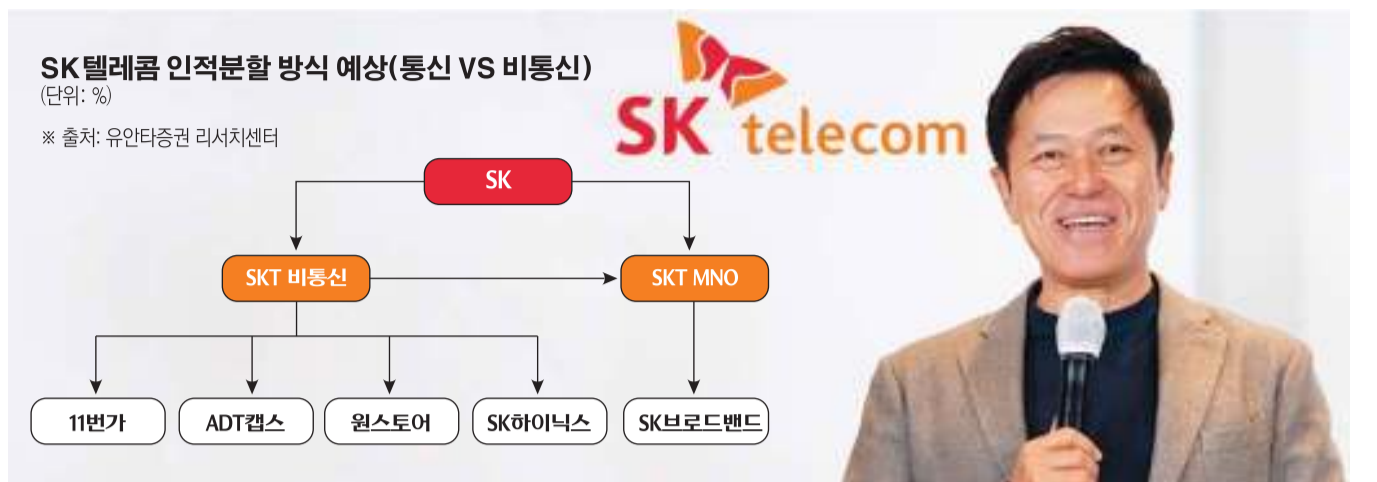
SKT는 "1984년 설립 뒤 30여 년 만에 통신 영역에서 벗어나 AI,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뉴 ICT 사업을 본격 확대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양한 ICT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제3의 창업'을 맞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설립된 것은 '제1의 창업', 1994년 공개입찰로 선정그룹에 인수돼 도약기를 맞이한 것을 '제2의 창업'으로 정의했다.

SKT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설회사와 SK㈜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분할 뒤 중간지주사와 SK그룹 간 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SKT는 합병설을 부인하면서



박정호 SKT 사장이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회사 분할의 취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인적분할의 취지는 통신과 더불어 반도체, 뉴 ICT 자산을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회사는 국내의 반도체 관련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SKT는 "과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 투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진행했을 때보다 더욱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100% 경영권 투자만 가능하다. 'ICT 투자전문회사'가 신설되면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 구조로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는 'ICT 투자전문회사'가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기존보다 반도체 사업 투자가 수월해질 것으로 SKT는 전망했다.

SKT는 추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새 회사명도 준비하고 있다.

박정호 SKT 사장은 14일 오후 온라인 타운홀 행사를 열고 이번 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키워 온 SKT 자산을 온전히 평가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분할 뒤에도 각 회사의 지향점에 따라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전자 브라질 타우바테 공장 직원들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12일(현지시간) 총 파업에 나섰다. 사진제공 브라질 타우바테 노동조합

LG '해외 스마트폰 공장' 딜레마

사업 철수 직원 보상안 이견 브라질 타우바테 노조 파업

'통합 생산기지' 베트남 하이퐁 가전·전장설비 전환 가능성

이달 초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밝힌 LG전자가 스마트폰 해외 생산기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장을 포함한 사업 매각에 실패하며 부지 청산·폐쇄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떠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 현지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해외 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해외 거점은 베트남 하이퐁과 브라질 타우바테, 중국 칭다오까지 총 세 곳이다.

사업 철수에 따른 움직임이 가장 빠른 곳은 브라질 타우바테다. LG전자는 타우바테 공장에서 스마트폰 뿐 아니라 모니터와 노트북 등 IT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인력 규모는 1000여 명, 공장 인력은 700명 수준이다.

LG전자는 이달 초 타우바테 공장 근로자들이 속한 해당 지역 금속노동자조합(Sindmetau)과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IT 제품 제조설비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나우스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이 이전 이유다. 사실상 공장 폐쇄다. 마나우스로 IT 제조 설비가 이전된다면 타우바테에는 콜센터와 스마트폰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인력만 남게 된다.

문제는 현지 직원들의 반발이다. 타우바테 노조는 12일(현지시간)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현지 협력사 3개 임직원도 이에 동참한 상황이다. 노사 면담에선 사업 철수에 대한 직원 보상안도 제시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뿐 아니라 베트남 하이퐁 등 다른 해외 공장도 사업 철수 과정에서 현지 직원과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하이퐁의 경우 전장을 비롯한 다양한분야의 연구·개발(R&D)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 정부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도 약 1000만 대에 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생산 인력도 브라질보다 훨씬 많다.

LG전자는 2014년 당시 흥이엔과 하이퐁에 나누어 있던 생산공장을 통합해 TV·스마트폰과 가전을 아우르는 '하이퐁 캠퍼스'를 구축했다. 여기에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생산 설비를 추가하며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퐁 공장의 경우 통합 생산기지라는 특성상 스마트폰 생산 설비를 가전이나 전장 설비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지 외신과 지방 정부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매체 투오이째(Tuoi Tre)는 "하이퐁 공장의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LG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하이퐁시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공장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현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재난기금 등 활용 검토”

안도걸 차관 “국가지원만으론 한계” 노란우산공제 활성화·정책보험 강구 월 1회 민관합동 재정운영위 가동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을 국가 차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달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한 안 차관은 우선 국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공제 형태로 돼서 상호 구조형태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폐업 시 공제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업수지보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보험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재원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시 가동해 재정관리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안 차관은 “월 1회 열어 재정 관련 이슈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재정운영구조와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기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2026년 69.7%로 전망, 다른 나라에 비해 중기적인 부채 증가 속도가 조금 높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가채무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것”이라며 “공공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 흐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2022년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12.3% 줄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한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을 보면 전년보다 8.4% 증가로 나온다며 이 내용이 4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신경 써야 한다”며 “재정 체력이 소모된 건 사실이니 체력 보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원과 메탈이 증착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까지〉

반도체 인재 4800명 육성

민·관 공동 인력 양성 프로젝트 추진 석·박사급 10년간 3000명 배출 계획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800명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각축전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연세대-삼성전자(연간 50명), 고려대-SK하이닉스(연간 30명) 등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기준 3만 6000명 수준인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은 10년 뒤엔 5만 명 이상까지 늘어야 한다. 매년 1500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월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까지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 등 총 4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기로 했다. 학부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특화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트랙을 내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민·관이 공동투자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고급인력 양성, 채용 유도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해 향후 10년간 총 300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단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초격차 유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우수인력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학계와 업계의 요청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여건과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개소식을 갖고 1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영운(왼쪽부터) 현대자동차 사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오늘부터 고속도 휴게소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

‘현대차 인프라’ 화성 등 12곳 설치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 가능 초고속 충전기 연내 123기 이상 구축

15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내 초고속 충전기를 123기 이상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개소식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에 맞춰 민관의 초고속 충전기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휴게소에 설치된 초고속 충전기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전기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18분 이내에



80% 충전 가능’)에 최적화해 설계됐다. 또한, 연중무휴로 24시간 충전할 수 있다.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화성휴게소를 포함해 안성(서울

·부산 방향), 내린천(서울 방향), 군산(서울 방향), 칠곡(부산 방향), 문경(양평 방향), 황성(강릉 방향) 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초고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15일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 초고속 충전기를 123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대상을 기존 200kW에서 300kW 이상까지 확대한 상태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다음달 중 초고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해 장거리 여행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면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초고속 충전기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산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탄소중립 ‘민관 수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연말까지 혁신전략 수립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분야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 소통 채널인 수소라운드테이블은 수소 분야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도출하고 논의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학연,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꾸려졌고 업계에선 포스코, 엘켄텍,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크, 두산퓨얼셀, SK E&S, 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경제 추진 경과와 탄소중립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고, 탄소중립기술기획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

GS리테일 과징금 54억 ‘SSM 중 역대 최고’

대금 떼먹고 부당노동 강요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킨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회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류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게 자사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빠빠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류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보험업계 최초 디지털 보험설계사
LIFE MD 런칭

생보업계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 AAA
13년 연속 획득

금융기업 최초
한화생명 e sports 창단

보험업계 최초 핀테크 센터
DREAMPLUS 63 오픈

생보업계 최초 태블릿PC 전자서명 시스템
Smart Planner 도입

생보업계 최초 베트남 진출
최다 해외 국가 진출

한화그룹 편입

보험업계 최초
계약자 건강진단 서비스 제도 도입

생보업계 최초
FP출신 여성임원 배출

생보업계 최초
계약자 이익배당 실시

대한민국 랜드마크 63빌딩
아시아 최초·최고층 준공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에는
수많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처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보험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고객의 삶 더 가까이에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할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가 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1일, 분할 신설법인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합니다.

文 “비위 의혹’ 전효관·‘막말’ 김우남 즉각 감찰하라”

민정수석에 신속 지시... ‘공직기강 다잡겠다’ 의지 전효관 비서관, 서울시 재직 때 자기 회사에 50억 일감 김우남 마사회장, 채용 반대 직원에 욕설·폭언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시행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내부 규정이 개선돼 무산됐다. 김 회장은

해당 보좌관을 월 700만 원 급여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폭로한 전 비서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A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 회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000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A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전남대로 이직한 2006년 이후 운영이나 지분관계, 사업 수주 관련해 일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文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치시 고이치(왼쪽)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연합뉴스

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

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일환 기자 whan@

공무원·지방의원 등 189만명 부동산 보유 14일내 신고해야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된다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14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사흘 연속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중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 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일중(오른쪽)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14일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회의에 앞서 이 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정무위·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공직자 정보 남용한 사적이익 금지

처벌 가능한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남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애초 정무위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로.

전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도 해결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방지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與 당권경쟁 본격 레이스 돌입

‘친문’ 홍영표 출사표...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

14일 친문(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다음달 2일 예정된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다. 홍 의원과 3파전을 벌일 전망인 송영길·우원식 의원은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첫 출사표를 던진 홍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했다. 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다”라고 친문 인사다운 출마의 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환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선거 패배 원인을 뜯어고치고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전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4일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당내 곳곳에서 다져진 입지를 토대로 당심을 모으고 있다. 그가 몸담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 민주당국민연대(민평연)를 통해 현역 의원들 대부분과 접점이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주호영 vs 중진 vs 초선’ 당권 신경전

김종인 떠난 국민의힘 ‘우왕좌왕’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두고 내부에선 치열한 경쟁 조짐이 보인다.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홍문표·윤영석·조경태 등 중진 의원은 물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 초선의 김용 의원 등 여러 주자가 나서서 당 대표를 노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당권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4일 오전 당 대표 권한대행과 연석회의에 참여해 차기 당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 출마를 노리는 중진들은 다른 주자들을 견제하며 자신을 부각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홍문표 의원은 “우리 당은 자강 시스템

이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가 모여 하나를 일렬종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주호영·정진석 의원에게 “패거리 정치”를 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초선 의원들도 출마를 준비하며 중진 견제에 나섰다. 김용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게 많았다”며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권을 두고 펼쳐진 지나친 경쟁이 당내 잡음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준상 기자 jooo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오세훈 효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가속도’

롯데 “2025년 충전기 20만대”
전기차 충전 수요·공급 일치하는
주거시설 중심 ‘질적 확대’ 기대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주거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을 반복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모빌리티 공약 발표 및 논의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서울에 전기차 급속·완속 충전기 20만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거시설에도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오 시장의 공약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 절반 이상은 ‘주거지 인근’에서 주로 충전을 한다고 응답했다. 전기차 수요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면 집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증가해왔지만, 충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공·상업시설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며 주거지나 직장처럼 충전수요가 높은 거점은 설비 확대에 뒤처진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파트, 다세대 등 거주지와 직장 업무지역에 충전수요가 크게 증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돼 현재 충전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동주택은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이 전체의 0.5%에 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나 일반 콘센트(220v)로 전기를 충전하는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속 충전기로는 모든 충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완속 충전기로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또한, 완속 충전기는 급속보다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부담을 적게 줘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막는 장점도 있다.

오 시장이 주거시설에 집중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펼친 만큼, 단순히 충전기 대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인프라의 ‘질적 확대’가 가능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첫 국산 전용 전기차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두 차종의 사전예약 실적이 연간 판매 목표치를 뛰어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주거시설 내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이용자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2019년 대비 49%나 증가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3년 만에 새 모델 ‘더 뉴 K3’ 더 날렵해졌다

그릴~전조등 크롬장식 입체감 ‘업’
10.25인치 대화면 유보 내비 적용

기아 상품성을 개선한 ‘더 뉴 K3’의 내·외장 디자인을 14일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K3는 2018년 2월 K3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로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최신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대표 준중형 세단으로 거듭났다.

더 뉴 K3의 전면은 얇은 전조등과 연결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했고, 그릴에서 전조등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느낌의 크롬 장식을 통

해 입체감을 살렸다. 더 뉴 K3는 실내에 10.25인치 대화면 유보(UVO)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클러스터를 적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유지 보조(LF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을 통해 주행 중 편의성을 향상했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안전 하차 경고(SEW) △운전자 주의 경고(DAW) △후방 모니터(R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등을 적용해 주행과 주차 시 안전성을 높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세계 권위 디자인상 연이어 거머쥔 ‘LG 오브제’

‘iF 디자인 어워드’ 4관왕 이어
‘레드닷 어워드’서도 31개 본상



LG전자 공간인테리어가전 ‘오브제 컬렉션’이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를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 대회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7800개가 넘는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G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오브제컬렉션 제품들을 포함

해 △인공지능을 갖춘 ‘퓨리케어 360도 공기정정기 알파’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 높은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LG 그램 등 모두 31개의 본상을 받았다.

LG 오브제컬렉션은 위시타워, 스타일러, 청소기, 휘센 타워,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패키지, 1도어 냉장·냉동·김치 컨버터블 냉장고 등 총 6개의 상을 받았다.

LG전자는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CMF(색상·재질·마감)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오브제컬렉션 전 제품의 CMF가 본상을 받아 제품 디자인에 이어 색상과 재질까지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았다.

LG전자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도 본상 4관왕에 올랐다.

노우리 기자 we1228@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시럽웰스는 시럽웰렛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고객센터
1599-8245

- * 본공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중점을 둔 종합투자자문회사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상품과 달리 예금·보험상품보다 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인터넷으로만 투자 거래에 맞는 투자 또는 수익형상품은 없습니다.
- * 본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본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본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약·바이오기업, 코로나에도 외형·내실 키웠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첫 단추 끼우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도 확대하며 K바이오의 근간을 다지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실적 추정치(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올해 1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씨젠이다.

지난해 업계 1위로 우뚝 선 셀트리온은 1분기에만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컨센서스는 5110억 원으로, 전년동기(3728억 원) 대비 37.07% 늘어난 규모다. 영업이익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 19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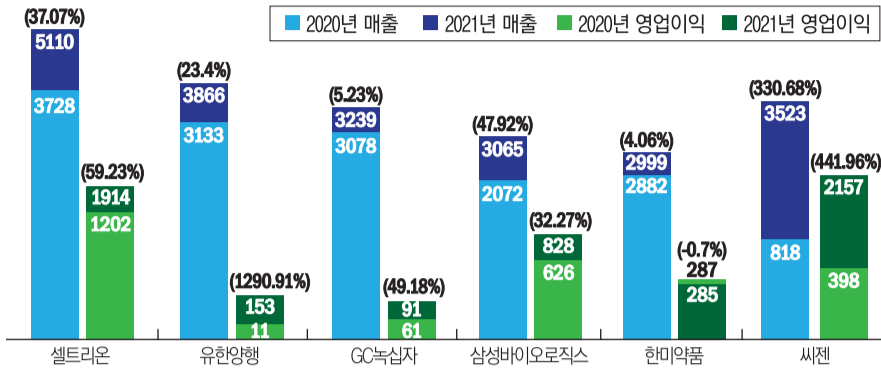
올해 셀트리온의 성장 동력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이다. 렉키로나주는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의 사용 권고 의견을 획득,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3번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최대 320만 도스의 렉키로나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유럽 허가를 받은 유플라이마는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다. 가장 먼저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지만, 휴미라 유럽 매출의 대부분이 고농도 제품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유플라이마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올해 연 매출 2조 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성공하면 1조 클럽 입성 2년 만에 2조 원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매출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집계됐다. 3공장의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조기 인식되고, 1공장의 정기보수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로는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출처: 에프앤가이드 ※ 컨센서스는 추정기관 3곳 이상 ※ ()는 증감률



셀트리온, 1분기 매출 37% 증가한 5000억 기대 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 등 두 자릿수 성장 '코로나 신데렐라' 씨젠, 영업이익률 60% 육박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할 전망이다.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관측이다.

유한양행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 매출 컨센서스는 23.4%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기저효과로 10배 이상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블록버스터 도입신약(상품)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던 유한양행은 잇따른 기수수출 성공을 기점으로 상품이 아닌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 등 자체개발 신약과 개량신약으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블록 확대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매출에 집중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익률이 높은 해외 원료의약품 사업도 3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 올해부터 연간 10%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의 매출 컨센서스

는 각각 3239억 원, 29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한 자릿수 성장세다.

실적 비수기를 맞은 GC녹십자는 컨센서스 하회 우려도 불거진다. 한미약품은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희소식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대상 기업 6곳 중 유일하게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집단 감염) 지속에 K 바이오 신데렐라로 떠오른 씨젠은 올해도 매출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씨젠은 연결기준 3월 매출이 1285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는 앞서 1월 1270억 원, 2월 966억 원의 잠정 매출을 발표, 1분기 잠정 매출이 3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컨센서스는 3523억 원으로 잠정 매출과 유사하다. 전년동기(818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분기 영업이익은 398억 원에서 215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씨젠은 6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진행중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진단키트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 전망 덕분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박미선 유산균”으로 갱년기 극복해요

휴온스 '엘루비 메노락토' 마케팅

휴온스가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엘루비 메노락토' 인기에 힘입어 소비자들과 교감하는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휴온스는 최근 '엘루비 메노락토'의 첫 얼굴로 방송인 박미선을 발탁해 TV 광고까지 선보이며 본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루비 메노락토'의 주 소비층은 중년 여성으로, 모델 박미선을 통해 여성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흡수성에도 직접 출연해 갱년기 극복 경험담을 공유하고 중년 여성들만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 친밀도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미선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반



응은 '엘루비 메노락토' TV 광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TV 광고가 방송되자마자 '박미선 유산균', '박미선 갱년기 유산균'을 찾는 이들이 쇄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 안의 나를 깨우다'라는 콘셉트의 이번 광고는 여성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을 활성화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엘루비 메노락토'의 작용 원리를 알리는 동시에 스스로 힘을 키워 갱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미선 기자 only@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복용법 바꿔 안정성 높여”

AACR서 추가 임상 발표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미국암연구학회)에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추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스펙트럼은 EGFR 또는 HER2 Exon 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포지오티닙 1일 2회 용법(BID) 투여 시 1일 1회 용법(QD) 대비 우수한 안정성 및 내약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데이터는 ZENITH 20으로 명명된 글로벌 임상 '코호트 5' 예비 데이터로,

'과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EGFR 또는 HER2 Exon 20 삽입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포지오티닙 투여에 관한 연구'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일 2회 용법으로 포지오티닙을 투여한 결과 내약성이 개선됐고 1일 1회 용법(QD)과 비교해 복용 중단률이 감소했다. 또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줄었고 항종양 효과 활성화도 확인됐다.

프랑수아 레벨 스펙트럼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여러 투여 용법 중 8mg씩 1일 2회 투여한(BID)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낮은 부작용 비율이 확인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스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되면 부모, CCTV '원본' 열람 가능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자에 편집 안된 화면 공개 외부 반출엔 '모자이크' 거쳐야 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일본 오염수 방출' 규탄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복부 치명상 가해 살인 미필적 고의”... 양부 징역 7년 6개월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권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데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부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지속적인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검정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 양의 팔이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비틀어져 으스러졌다고 설명했다. 대장과 소장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두 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김종용 기자 deep@

5000억 쏟아붓고도 '산재사망' 역주행

지난해 27명 늘어난 882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목표치(725명 이하) 달성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산재 예방 예산을 투입해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제조업(합산기준)에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0명 늘어난 458명(이중 추락사망 236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51.9%에 달하는 수치다. 제조업 사망자는 5명 감소한 201명(이중 끼임사망 60명)이다.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상회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94명(전년대비 10명 ↓)으로 전체 10.7%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전년대비 54명 ↑)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산재사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업무상 질병 사망 근로자 수는 1180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정부는 작년 이전 물류창고 화재사고(38명 사망) 영향 등으로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 산재사고 업종인 건설·제조업에서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사망 주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 사고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삼고 안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2017년 3768억 원에서 2020년 513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패트롤(순찰)카' 같은 특별 대책도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산재 사망자 505명 감축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관측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š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 5 소비자와 기업구매자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지향적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지향적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 11 소매업과 도매업 |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적판매와 판매촉진 |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Dr. Different



자본시장 속으로



이대우 로보어드바이저문 대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관한 내용을 투자론으로 보면 시장을 알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투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기원전 6세기) 춘추(春秋) 시대와 전국(戰國) 시대 사이에 쓰여진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병서다.

조조가 붙인 주해에 따르면 손자병법 제 1편은 시계(始計)편으로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齊)나라(현재의 산둥성, 당시의 선진국) 손자는 29세에 오(吳)나라 합려(闔閭)에게 자신이 쓴 병법서를 브리핑하면서 첫 서두를 이렇게 꺼낸다.

察也(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전쟁터는 병사의 생사가 달린 곳이며, 나라의 존재와 멸망이 정해지는 길이므로 반드시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知可以興戰 不可以與戰者勝(지 가이여전 불가이여전자 승, 싸울 수 있을 경우와 싸울 수 없는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두 번째, 雜策寡之用者勝(식 중과지용자 승, 많은 병력일 경우의 전술과 적은 병력일 경우의 전술을 아는 자는 승리하고).

상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장기 시계열과 중기 및 단기 시계열을 어떻게 결합해서 분석할 것인지 고민한다.

네 번째, 以虞待不虞者勝(이우대불우자 승, 조심하여 경계하면서 적이 경계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자는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將能而君不御者勝(장능이 군불어자 승,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즉, 철저하게 계산에 근거하여 승산을 따지되, 톱다운(TopDown) 방식에 근거하며, 시장의 상태를 분석하고 어느 국가와 어떤 업종에 자산을 배분할지 결정하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자의 사결정을 내릴 것이며,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손자병법에 물과 관련된 구절인 水之行(수지행), 避高而趨下(피고이추

하) 水因地而制流(수인지이제류) 故兵無常勢(고병무상세) 兵之形(병지형), 避實而擊虛(피실이격허) 兵因敵而制勝(병인적이제승) 水無常形(수무상형) 能因敵變化而取勝者(능인적변화이취승자), 謂之神(위지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관한 내용을 투자론으로 보면 시장을 알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투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부터 투자라는 먼 여행을 시작한 우리는 종목보다 시장의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 투자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물과 같이 시장에 순응하여 승산(勝算)있는 투자계임을 할 때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차 등 산업과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접목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AI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국방수권법을 통해 AI를 육성하고 있다.

자하고, 별도로 국립과학재단, AI 슈퍼컴퓨터 운영,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에도 6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자율차와 스마트 가전용 AI 칩 개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AI 기업 간의 협업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특구 늘리자

미 공군 전통 수직 이착륙기의 센서 시스템에 탑재한다.

AI는 지금 모든 산업에서 발전 단계와 기술 수준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가치사슬 영역과 융합하는 공통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각각 정부와 기업은 A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윤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AI 시장 규모가

2018년 1조 원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38.4% 성장해 10조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AI 업체 중에 세계적인 기업은 아직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헨리 제임스 명언 "미인은 얼굴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아,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에 결점이 있어도 매력이 유지되는 사람이다."

☆ 고사성어 / 관중규표(管中窺豹) 대롱 한가운데로 표범을 엿보는다는 뜻. 좁은 시각을 이른다.

☆ 시사상식 / 마일스톤 징크스(Milestone Jinx) 추가지수가 1500, 2000, 2500 등 특정 분기점에 도달하기 직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고추 산초나무 '초'를 쓴 고초(苦草)에서 왔다.

☆ 유머 / 진동벨 반호 카페에 처음 간 청년이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았다.

기자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돌다리만 두드리다 발등에 불 떨어진 K방역

증가세다. 전세계적인 공급난 때문이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져서야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됐다. 자가검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변화다. 업계는 "이제 와서?"란 반응이다.

단축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당장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사용 계획이 없었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 왔더라면 필요 시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흐름은 백신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 정부는 K방역의 선전에 기대어 백신 확보를 우선 순위에 놓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결국 자가검사키트의 도입을 결정했다.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앞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고, 1호 사건을 두고 수뇌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밖으로는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출범 초기 김 처장의 '협조'와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전까지 수십 년간 부침을 겪었다. 공수처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등장했지만 줄곧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 정부 들어 공수처 설립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2019년 4월 공수처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공수처장 인선이 문제였다.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

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넘도록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져 한 달여 뒤인 1월 말 김 처장이 임명됐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공수처였지만 앞으로의 기대는 컸다. 공수처는 대법원과 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신력을 높일 대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운 서울중앙지검

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 등 특혜 조사 의혹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진위를 떠나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어야 할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외중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유보부 사건 이첩' 법제화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유보부 이첩'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인데, 지난달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소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이보다 효율적인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의 기소권을 가지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지금이냐는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공수처의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과의 첫 단추도 잘못 끼웠다. 태생부터 어지러웠던 공수처의 앞날이 갈등으로 점철될 수 있다. 상호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검찰개혁에 동참할 뜻이 있다면 검찰도 날을 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진영 간 논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공정'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js62@

사설

취업자 1년 만에 증가, 고용 개선된 게 아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13개월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3월부터 고용이 큰 폭 줄어든 데 따른 기저(基底)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작용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작년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줄었다.

연령별 취업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인 60세 이상(40만 8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3만 명), 50대(1만 3000명)도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중추인 30대(-17만 명)와 40대(-8만 5000명)는 줄었다. 산업별로는 세금일자리 증가가 뚜렷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반면 코로나 피해가 큰 도·소매업(-7만 1000명), 숙박·음식점업(-2만 8000명)의 감소는 여전하다. 질 좋은 제조업도 전년보다 1만 1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1월 반짝 늘어난 것 말고, 2018년 4월부터 한번도 플러스를 보인 적이 없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의 위기를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가에서 기저효과나 세금 일자리를 배제하면, 여전히 고용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3월 실업자가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2018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고,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4.3%, 청년층 지표는 25.4%로 여전히 최악의 고용난이다.

업종이나 연령대별 취업자 지표도 고용시장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조업 일자리, 경제활동 주력 연령대 등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자 수는 증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표가 좋아진다 해도 지난해의 감소세에 이은 기저효과나 세금일자리로 인한 착시(錯視)로 봐야 한다.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거리가 멀다.

고용시장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집단면역인데, 지금 우리 상황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백신 확보가 늦어졌고, 언제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지 전혀 가늠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고용시장 회복 전망 또한 안갯속이다.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드는 관제(官制) 일자리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관철은 일자리가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지부터 고민하면 해법이 나온다.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게 최대의 문제다.

노트북을 열며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정세균 총리의 '축구 라이벌' 이란 방문

이란은 우리의 축구 라이벌 중 하나다. 지금까지 역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열위다. 대(對)이란 전적은 9승 9무 13패다. 축구 경기 장소가 이란일 때 축구 해설 전문위원들의 전망 또는 결과에서 빼놓지 않았던 말, '고산지대'. 테헤란은 해발 1200m에 있다. 이보다 낮은 고도에서 생활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테헤란에서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테헤란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지지 않았다. 이기거나 비기거나였다. 우리보다 피파(FIFA) 랭킹이 8단계 높은 이란을 상대로 우리로서는 어웨이, 이란 입장에서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이다. 피파 랭킹은 이란이 31위, 한국이 39위다.

이란 이란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 1977년 테헤란 시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삼릉로가 '테헤란로'로, 테헤란의 니아에시리가 '서울로'로 이름을 바꿨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방문 이유는 '한국과 이란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 마련'이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인 2017년 이란에 방문한 바 있다. 정 총리 본인으로서 4년 만의 방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이란에 방문한 것은 1977년 최규하 전 총리 이후 44년 만이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이란에 국무총리의 방문이 이번이 두 번째란 사실에 정 총리도 놀라다는 반응이었다.

그런 만큼 정 총리는 이란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에 이란에 도착해 공항에서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오후 6시 제1부통령과 면담을 했다. 다음 날 오전 정 총리는 이란 국회의장 면담을 한 뒤 최고 지도자 고문도 만나 한·이란 우호 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바빠 다녔다. 이란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도 듣고 격려를 하기도 했다. 상사맨 출신이며,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고인지라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이다.

정 총리는 동행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이란 지도자들이 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을 꼽았다. '찐친'이다. 사실 정 총리의 방문은

한국 내 묶여 있는 이란 자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은 확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고 저는 그 돈은 이란의 돈이라고 말했다"고. 맞는 말이다. 우린 이란에서 석유를 샀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제 제재로 인해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관련 국가 간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물건을 샀으면 돈을 내는 게 이치다. 국제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 한·이란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정 총리의 이번 방문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물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등이 수행한 것이다. 2017년도에는 120억 달러였던 대(對)이란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무역에선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다. 정 총리의 이란 방문이 한·이란 우호 관계 복원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축구도 '찐'으로 붙고 말이다. 테헤란에서 riby@

한 킷



난관 부딪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 교통체증 심화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검토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굳게 닫힌 철문 틈 사이로 한창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모습이 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첫 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친환경 윤활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용기부터 성능까지 그 어떤 것도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그 시작을 SK이노베이션이 함께 합니다